

광남시론

광주정신과 대동세상 합동 세배

위인백

(사)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



민족의 대명절 설은 수천 년을 내려온 우리의 고유 명절로서 과거를 기념하거나 현재를 즐기는 날에 머무르지 않고 조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며 기약하고, 오늘날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다지는 날이다.

이렇게 설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시간을 쇄고, 사람을 쇄며, 마음을 쇄는 날이기에 옛것을 익히고 새로움을 창조하는 은근지심으로 전승해 나갈 민족의 대명절이다.

연년세대로 내려온 미풍양속은 아름답고 좋은 풍속과 도덕을 의미하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바람직한 언행과 관습을 뜻하며 이러한 전통과 역사는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향과 예향으로 불려오는 우리 지역은 역사적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어느 지역보다 선봉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현대사에서 커다란 획을 그은 위대하고 숭고한 5·18민중항쟁 정신은 이를 계승한 6.10항쟁과 촛불·빛의 혁명을 통해 국민주권정부를 수립함으로써 광주는 민주주의의 성지가 됐고, 광주정신은 고유명사가 돼 대내외에 자리 잡았다.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광주는 질곡의 유신독재정권 시절부터 설을 맞이해 민주화의 동지들이 민주 원로

덕을 찾아다니며 세배를 드려오다 해마다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도 민폐다 싶어 1998년경부터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동지들이 금남로 YMCA에 모여 합동으로 세배하고, 지난해를 되돌아보면서 새롭게 마음을 다지며 의로운 분들에게 초상화를 증정해 온 행사는 의향 광주만이 갖는 전국에서 유일한 전통이고 자부심이다.

올해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과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까지 어느 해 보다 많이 모인 가운데 친위쿠데타를 막고 대통령을 잘 뽑고 나니 즐거운 마음으로 설을 썼다는 흐뭇함과 더불어 한편으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중추적인 시대에 외교와 안보를 잘해줄길 바라는 국민민인과 광주·전남의 통합에 따른 의견들이 대종을 이루면서 특별시의 명칭과 특별시장에 대한 의견까지 분분했다.

광주는 이렇게 5·18민중항쟁을 통해서 민족이 역사의 전면에 나선 위대한 항쟁으로 현대사에 커다란 획을 그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알려졌으며, 민주가족 합동 세배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서 대동세상의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자리 잡고 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의견을 나누다 보면 해답이 나오기 마련이다.

광주·전남통합 특별시의 명칭은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알려진 광주정신으로 볼 때 광주특별시로 해야 당위성과 대의명분이 있고 미래가 있다.

다가올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부강한 광주로 발전하기 위해선, 미래산업인 AI, 에너지, 모빌리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문가이거나 최소한 이러한 분야를 이해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을 찾아야 하고, 아울러 낙후된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선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의 경제성에 걸맞게 중앙부처에 광주란 이름으로 콘소라도 칠 수 있는 뱃심과 열정을 가진 인재를 찾아야 한다.

혹자는 지금 거명된 인물 중엔 마땅한 사람들이 없으므로 중앙부처에 있는 적임자를 호출해야 한다면서 2~3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으나 그들은 중앙부처에서 국가나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역할을 분담토록 해야지, 이는 긴 안목으로 보지 않는 근시안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인물을 키울 줄 모르거나 알려고도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기만 하지 그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알리고도 하지 않고 비난부터 한다. 시장은 물론 교육감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다선의 중진의원 없다. 국회의원은 선수가 2~3선은 돼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광주만 하더라도 8명 중 7명이 초선이다.

이래서는 비중 있는 인물이 클 수가 없다. 최근에 지방선거에 뜻을 둔 예비 후보자들 출판기념회 책을 읽어보니 정말 그동안 많은 역량을 길렀을 뿐만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단체장을 보고 감동한 바 있으며, 지금으로선 차기 대권후보로 송영길대표가 보이므로 이러한 인물에 대하여 애정을 갖고 응원해서 광주도 이런 대통령을 배출해야 하지 않겠는가!

내년 설에는 광주정신에 부합한 특별시장이 대권을 바라본 정치인과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한 광주의 이름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초청하여 5·18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합동 세배를 하면서 면면히 이어온 광주정신으로 통합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열어갔으면 한다.

기고

‘차량용 소화기’, 가족을 지키는 1.4kg의 약속

송성훈

광주 남부소방서장



현대인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생활의 중심이 되는 제2의 거주 공간이다. 주말의 설레는 나들이부터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길까지, 우리는 하루의 상당 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낸다. 하지만 익숙하고 편리한 공간 이면에는 언제 터질지 모를 ‘차량 화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통계는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차량 화재는 2만건을 웃돌며, 이는 매년 4500여건, 하루 평균 12건의 화재가 전국 도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엔진 과열, 제동장치의 마찰열, 노후 배선의 단락 등 화재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참혹하다. 특히 고속도로나 터널과 같은 폐쇄적인 공간에서의 화재는 연쇄 추돌과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위험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됐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에만 소화기 비치 의무가 있었으나, 이제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승용차로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이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의 중요성을 국가적

으로 재확인한 조치다. 차량 화재는 휘발유나 경유 같은 인화성 물질과 시트, 내장재 등 가연물이 가득한 특성상 연소 속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운전자가 직접 손을 쓸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단 몇 분에 불과하다. 이 찰나의 순간에 소화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한 개인의 재산 보호를 넘어 타인의 생명까지 결정짓는 변수로 이어진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지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부터 적용된다는 점이다. 즉, 법 시행 이전에 등록되어 현재 도로를 달리고 있는 수많은 기존 5인승 차량은 여전히 법적 의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장을 지키는 소방관의 입장에서 볼 때, 화마는 결코 차량의 제작 연도나 소유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찾아오지 않는다. 오히려 노후화된 차량일수록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화재 위험은 더 높다.

법이 ‘신차’ 대상으로 안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 시민은 스스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의 실질을 완성해야 한다. 내 차가 법적 강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는 것은,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주의에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안전은 법의 명령에 따르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능동적인 선택이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보통 1.4kg 내외의 작은 크기다. 하지만

초기 화재 단계에서 이 작은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한다. 화재가 엔진룸 내부에서 시작됐을 때, 신속하게 소화기를 분사하면 대형 폭발이나 차량 전소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본체 표면에 ‘자동차용’이라는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

비치 장소 또한 중요하다. 많은 운전자가 소화기를 트렁크 깊숙한 곳에 집고 함께 섞여두곤 한다. 하지만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당황한 상태에서 트렁크를 열고 짐을 헤치며 소화기를 찾는 시간은 이미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든다. 위급 상황에서 1초 만에 꺼낼 수 있도록 운전석 옆이나 조수석 문 옆쪽 문 손이 닿는 곳에 두는 것이 진정한 안전의 완성이다.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상식이 된 것처럼,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 또한 운전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미 소화기를 구비하고 있다면 제조일자를 확인하고 압력계의 바늘이 초록색 범위에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더불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마음을 전할 때, 차량용 소화기를 선물해 보는 것은 어떨까. 화려한 선물보다 더 빛나는 것은 상대방의 평안을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일 것이다.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건네는 소화기는 그 어떤 선물보다 묵직하고 따뜻한 울림으로 다가갈 것이다.

취재수첩

공공기관 2차 이전 과정은?

이승홍

경제부 부장



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 단위 지역에 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같은 맥락에서 제시됐다. 이전 자체보다 이전 이후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중시하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기준에서 광주·전남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지난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고,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농생명·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이 이미 지역에 정착해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은 AI·자율주행, 에너지·탄소중립, 농생명 산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와 교통 분야 공공기관을 유치해 자율주행 실증 환경을 구축하고, 에너지 관련 기관 이전을 통해 에너지 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여수석유화학산단과 광양제철

소 등 기존 산업 기반을 양세워 환경 분야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 특성을 활용해 기술 실증과 정책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농생명 분야 역시 핵심 전략으로 꼽힌다. 이미 농업·수산 관련 공공기관이 입지한 상황에서 농업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이전을 통해 생산·유통·금융 기능을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전국 최대 농업·수산 생산 거점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와 함께 민·군 공방 통합 이전과 연계한 공방 운영 기관, 기술 실증과 산업 육성 관련 기관, 말산업 관련 기관 유치도 검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지역 성장 기반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1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정주 여건 미비와 지역 산업 연계 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된 만큼, 2차 이전에서는 같은 한계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물리적 이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전 이후를 겨냥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후속 대책 마련이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사설

전남 가축전염병 비상 “차단 방역이 살길”

이번 겨울 전남에 가축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다. 주로 전남 중서부권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African Swine Fever)과 H5 조류인플루엔자(AI·Avian Influenza) 등이 번갈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3일 현재 전남 도내에서는 ASF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각각 3건과 9건 발생했다고 한다. 지난 20일에는 돼지 3600여마리를 사육 중인 무안 현경면 한 양돈농장에서 ASF가 검출됐다. 농장주의 돼지 폐사 신고로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가 정밀 검사를 한 결과 ASF로 최종 확진된 것이다.

이로써 전남 ASF 발병은 지난해 26일 영광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나주 봉황 양돈농장에 이어 3번째다.

ASF는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료제·백신이 없어 급성인 경우 폐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는 등 국제적 교역에 중요한 제1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다행히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돼지에 대해 신속한 살처분을 하고 청소·소독 및 주변 지역 환경오염 차단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무안 인접 목포와 나주, 영암, 함평, 신안 양돈농장 및 축산관계 시설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정부도 ASF가 유행해 전국적으로 19건 발생하는 등 이례적으로 확산 방지 방역을 강화하고 전방위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한다.

또 전남에서는 AI가 지난해 12월 19일 영암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나주, 곡성, 구례 등에서 모두 9건이 발생했다.

방역 당국은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 가금농장 정밀검사와 주변 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동원해 소독에 나섰다.

이들 가축전염병, 특히 ASF는 확진되면 백신·치료제가 없어 폐사율이 높아 의심 즉시 신고와 발생 농장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차단방역만 이 살 길이라고 한다.

긴장을 늦추면 급속도로 확산되는 전염성이 강한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의 체계적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광산구 ‘살던집 프로젝트’ 주거복지 대명사

주거에 의료·돌봄을 통합한 개념인 광주 광산구의 ‘살던집 프로젝트’가 주거복지 정책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광산구가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장기 입원환자가 요양원, 요양병원 등 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주거, 건강, 의료 등을 함께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즉, 초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맞춰 시설 중심의 돌봄을 지역·주거 중심으로 전환해 이들에게 존엄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인 것이다.

이를 위해 우산동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사업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광주도시공사와 협업해 ‘케어홈센터’, ‘중간집’ 등 사업 기반시설을 마련했다.

지난해 송광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문을 연 ‘케어홈센터’는 돌봄 전담 인력 8명이 상주하는 돌봄 콘트롤타워로,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맞춤형 방문 운동 및 건강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중간집은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온전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치료와 재활, 생활 밀착형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준비공간이다.

이 프로젝트는 시행 1년도 채 안돼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전북 고창군, 경기 화성시 등에서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고 경북 포항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이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훌륭한 표준 모델로 평가하고, 전국적인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당연히 상복도 터졌다.

최근 한국주거복지포럼 주관 12회 주거복지 활동 우수사례 공모에서 주거 기반 통합 돌봄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받으며 영예의 대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은 것이다. 이는 단일 정책으로 지난해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종합대상과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3번째 수상이다.

그만큼 이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주거복지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주거·의료·돌봄을 연계해 사람,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주거 복지만이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도 지속되고 확대돼 나갈기 기대한다.



www.GwangNam.co.kr

Table with 4 columns: Name, Position, Phone, and Address. Includes contact info for Gwangju City Office and subscription rates.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